

20世紀 後半期 釜山 製造業 統計의 整備와 形態*

朴 永 九** · 張 智 勇***

논문 초록

부산지역경제의 전략에 있어 항상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부산지역 제조업 통계는 현재 기본적인 시계열 통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고, 또 일부 공刊 통계마저 신뢰성이 의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첫 연구로 (1) 부산의 제조업과 관련된 국내외 유사 통계를 포함한 모든 통계를 찾고, (2) 이를 기초로 부산의 제조업 통계를 환산, 수정, 정비할 수 있는 방법과 메뉴얼을 제시하면서, (3) 실질적인 차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값으로서의 1945년 이후 부산의 제조업 통계를 일차적으로 정비한 후, (4) 장기 생산자 물가지수를 구해 경상가격과 불변가격으로 정리하고 (5) 통계적인 단층으로 나타나는 기간을 중심으로 경제적 정합성을 검토한다.

핵심 주제어: 부산, 제조업, 역사장기시계열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N0, O1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F-2001-042-C00070).
자료와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부산시 주수현, 홍연진 박사님, 한국은행 조태형 과장님, 그리고 공동연구의 김대래, 김종한, 김호범, 박섭, 정이근 교수님과 3차에 걸친 발표시 유익한 지적을 해 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고는 학회지의 지면 한계상 핵심사항만 기록하였으므로 자세한 통계의 내용과 수정, 환산, 정비 과정이 필요한 사람은 저자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e-mail: parkyg@pufs.ac.kr.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e-mail: symomm@kornet.net.

I. 서론

세계화, 지역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 문제를 거론할 때면 언제나 그 지역의 제조업 부문이 논의의 중심이 된다. 지역사회로서 부산의 문제를 접근하는 경우 역시 부산의 산업구조 문제와 제조업 문제가 그 동안 중점적으로 거론되어져 왔다.

그러나 논의와 주장은 대부분 선형적인 인식과 수치에 입각한 것이고 사실 부산의 제조업은 자체적인 장기 시계열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문, 산업, 정치 등의 모든 면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통계이다. 그러나 인구 380만으로 한국의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있으면서도, 부산은 여전히 기본적인 제조업 시계열 통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최근 지역 통계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지만, 역시 얻을 수 있는 최근 통계의 소개와 문제점 지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정기룡·주수현, 1995; 정승진·강성권, 1999), 현재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료들을 뒤져 부산 제조업 통계를 일관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은 장기적인 시간과 비용의 필요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한국의 모든 지역사회에 공통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 자체가 바로 오늘날 한국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선형적인 판단이나 주장이 아닌, 통계에 입각하여 과거와 현실과 변화를 일관되게 봄으로써 지역별, 나아가 거시적인 한국의 경제성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지역 제조업 통계는 지역의 산업 전략을 보다 분명히 하고 선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지방의 모습을 분명히 밝혀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런 필요성과 지역 현실 속에서 일차적으로 국내외 모든 자료로부터 부산지역 통계를 찾아내고 그 형태와 성격을 확인하면서 부산 제조업 장기 시계열 통계를 정비해 보려고 한다. 정비하고자 하는 대상은 1945년 이후 부산 제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급여액, 생산비, 출하액, 연말재고액, 그리고 유형고정자산변동에 관한 통계이다. 본 연구는 지역통계가 현재 기본적인 시계열 통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고, 또 일부 公刊 통계마저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점, 그리고 장기 지역 제조업 통계 연구가 시도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우선 첫 연구로 (1) 부산의 제조업과 관련된 국내외 유사 통계를 포함한 모든 통계를 찾고, (2)

이를 기초로 부산의 제조업 통계를 환산, 수정, 정비할 수 있는 방법과 매뉴얼을 제시하면서, (3) 실질적인 차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값으로서의 부산의 제조업 통계를 일차적으로 정비한 후, (4) 장기 생산자 물가지수를 구해 경상가격과 불변가격으로 정리하고 (5) 통계적인 단층으로 나타나는 기간을 중심으로 아주 간단히 경제적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락값을 추정하거나 본격적인 부산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것은 배제하고, 어떤 형태로든 그 근거를 구할 수 있거나 혹은 경남 값 등 존재하는 관련 값을 이용해 논리적으로 환산가능한 부분까지 통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II. 통계정비의 방법

1. 지역 장기통계의 일차적 문제와 해결

지역의 해방 후 제조업 장기 통계 정비에서 일차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 장기 시계열 통계는 지역면적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해방 후 부산의 면적은 계속 변동되고 있으나 통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준 해는 1963, 1978, 1989년의 세 차례이다. 물론 수학적 의미의 성장률을 구하려면 현재 시역(市域) 기준으로 수정해야 하지만, 부산시의 경제성장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그대로 포함하기 위해 본 고에서는 시역 변화를 그대로 집계한다. 하지만 인구나 지역이 확장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통계적 단층과 경제적 의미를 검토해 보아야 함은 물론이다.

두 번째, 해방 후 장기통계의 경우 화폐단위의 변화가 있었다.

해방 직후 사용된 화폐는 1:1로 환산된 원이었다. 그러다가 1953년 2월 15일 「2차 긴급통화·금융조치」가 발효되어 ‘원’ 통화의 유통이 정지되고 ‘환’이 사용되었는데 원과 환의 교환비율은 100 대 1이었다. 제 3차 통화조치인 「긴급통화조치법」은 1962년 6월 10일에 발효되었다. 이 때 화폐단위는 1/10로 평가절하되어 다시 “원”으로 표시되었다. 따라서 장기시계열에서 1945-52년의 화폐금액은 1,000:1로 환산해야 하며 1953-1961년의 화폐금액은 10:1로 환산한다.

세 번째, 장기 시계열에서의 제조업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하부터 공업조사가 실행되고 있어 해방후 제조업의 기준은 오늘날의 제조업 기준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일부 기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 토목건축업이다. 물론 현재 제조업에서 제외되어져 있는 토목건축업은 일제하 1920년대 이후 이미 공업통계에서 제외되어져 있고¹⁾ 1950년대 이후 자료에서도 공업에서 빠져 있는데, 1948년 발행된 남조선과도정부의 노무력 조사와 1949년 조선은행 발행의 『經濟年鑑』에서만 공업, 공장통계에서 발견된다.²⁾ 과도정부의 노무력조사는 일제하 기준을 따랐다고 되어 있고 이미 일제하부터 토건은 공업에서 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므로 여기에서 공업에 포함된 토건은 다른 의미가 있다.

실질적으로 남조선과도정부(1948) 자료에 의하면 1946년 공업에 포함된 토목건축 사업체는 전국 132개로 나오는데 해방 직후 많은 감소가 있었다고 하나³⁾ 인쇄출판업 228개 사업체보다 적고,⁴⁾ 또 부산의 경우 토목건축업이 10개만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믿을 수 없는 수치이다. 확인을 위해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경제연감』(1949)에서 토목건축 회사수를 발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회사기업의 비율은 부산의 전체 제조업에서 20%, 5인 이상 제조업체의 50% 미만이었는데(釜山府, 『釜山の産業』, 1935-36, 1942; 조선은행 조사부, 『經濟年鑑』, 1949) 여기에서 발견되는 토목건축 회사수는 1946년 20개로 오히려 사업체수 10개보다 많게 나와 있다. 따라서 과도정부에서 공업으로 분류한 46년 토건 10개 공장은 제재 및 목제품, 요업 및 토석업에 포함시키지 않은 '토목건축업 중 토목건축자재도 생산하는 업체'를 따로 분류한 것으로 처리했다.

네 번째, 통계대상에 관한 것이다.

제조업과 관련된 장기 통계를 찾아보면 1990년대까지도 정확한 용어를 정의하지 않고 공장, 기업체, 회사, 사업체, 사업장 그리고 등록사업체를 그때 그때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한다. 통상적으로 회사는 법상의 등록여부에 의해, 기업체는 경영주체에 따른 분류를 의미한다. 등록사업체는 부산시 공업과가 매년 추계한 등록사업체를 말하는데, 정의없이 1993년까지 발표되다가 95년 『부산통계

1) 『釜山の産業』이 일제시대에 계속 발간되는데 여기에도 토목건축은 빠져있다.

2) 『조선경제통계요람』(1949)은 노무력조사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동일하다.

3) 조선은행 조사부, 『경제연보』(1948)는 일제하와 1947년의 분류가 다른 것을 그대로 비교하여 감소율이 과장되어져 있다.

4) 회사수로 볼 때 1947-48년 토건회사가 인쇄, 출판 회사보다 서울은 3배, 인천은 2배, 부산은 4배, 대구는 7배에 달하고 있다. 조선은행 조사부, 『경제연감』, 1949.

연보』에서부터 사라졌다. 정의를 정확히 내리고 있는 것으로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가 조사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체는 ‘임금, 매입고, 매상고 및 영업비를 개별로 계산기록하는, 또는 알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임금대장을 별개로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한국은행조사부, 1956c; 상공부·한국산업은행, 1961).

본 고에서는 일제하 공장조사에 이어 해방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까지 가장 일관되게 대상으로 하는 임금대장 중심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정의, 분류가 확실하고, 둘째, 제조업 변수들이 노동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⁵⁾ 경제적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셋째, 나아가 제조업 장기 시계열 통계를 작성할 경우는 통계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단, 통상적인 광공업조사통계의 원칙에 따라 본 통계정비에서도 정부의 전매사업에 속하는 煙草 제조업과 관영, 민영의 製鹽業을 제외하였으며 중앙정부의 회계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체와 국군 및 유엔군, 주한외교기관의 사업체 역시 제외하였다(한국은행 조사부, 1956c; 중소기업은행, 1963).

따라서 1945년과 1948년의 경우처럼 회사수만을 구할 수 있는 경우나 1949년, 1956-57년처럼 공장수만을 구할 수 있는 경우,⁶⁾ 당시 통계기준을 검토하면서 가장 사회경제상황이 유사한 기간, 그러면서도 통계적 상관성이 가장 높은 근접시기의 비율을 구해 환산한다. 이에 따라 1945년은 46년, 1948년은 47년 회사수/사업체수 비율로 제조업 사업체수를 구하고 56-57년의 경우는 58년 공장수/사업체수 비율을 이용해 사업체수를 구한다. 1949년은 상공부(1950)의 전국 공장조사를 바로 이용한다. 왜냐하면 부산시의 통계에서 일반적으로 1954년까지 공장=사업장=사업체로 사용되었으며, 해방 직후 1940년대의 『조선은행』(『조선경제통계요람』, 1949; 『조선경제연보』, 1948) 역시 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적어도 1940년대에는 공장=사업체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조사대상의 규모에 관한 것이다.

규모에 대해서는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나 통계의 정확도, 일관성, 실질적인 조사 및 통계의 존재형태 등에서 역시 통상적인 광공업조사통계의 원칙에 따라 상

5) 1980년대 이후 자본대체가 나타나므로 꼭 일관된 陽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 경남의 『도세일람』 3권(1957, 1958, 1959)에서 발견되는데, 부산지방해운항만청(1996)에서 『도세개람』 출처로 나와 있는 부산 사업체수는 출처, 용어가 틀린다.

시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체로 한다.

문제는 상당수의 통계가 이 점에 대해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단 해방직후 남조선과도정부중앙경제위원회(1948)의 자료는 일제시대의 분류방법을 따랐다고 되어 있는데 일제시대는 대개 공장 규칙에 따라 조사했고 1944년 수치와 바로 비교하는 것을 보면 5인 이상 고용 공장(사업체)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1960년대 초까지 남조선과도정부 자료(1948)를 포함하여 조선은행 조사부(1948) 그리고 상공부(1950), 한국은행(1956c) 등 일부 자료들이 5인 이상 조사라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조사내용을 보면 1-4인 업체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기적으로 발견된다. 계속 발견되는 점에서 오류는 아니며 이는 원래 혹은 시설, 평균 등의 면에서 5인 이상 업체이면서도 조사 당시 운영자금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종사자수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대로 5인 이상 사업체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부산상공명감』(1962)에서처럼 분명히 4인 이상 조사이거나 4인 이하가 다수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 모든 개개 기업을 조사하여 4인 이하를 제외하고 5인 이상만 더하여 사용한다. 나아가 1967, 1969년 재고액처럼 10인 이상 사업체 재고액만 찾을 수 있되, 증감액 비율 등을 이용해 환산이 가능한 경우 5인 이상 재고액을 구하고 이를 주에 밝혀둔다.

여섯째, 종사자 기준에 관한 것이다.

종사자수(종업원수)는 1970년대 이후 “월평균 종사자수”를⁷⁾ 기준으로 하므로 이에 따르되⁸⁾ 그 방법은 <표 1>의 관계에 의해 정비한다.

〈표 1〉 종사자수 정비 방법

구분	추계내용
종사자수(종업원수)	상시종업원수 + 임시 및 일고 종업원수
	피고용자수 + 사업주 및 무급종업원
상시종업원수	상시 실무에 종사하는 기업주 + 상시실무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업원 + 상용종업원(생산/관리직, 사무직, 기술직 종업원)
피고용자수	상용종업원 + 임시 및 일고종업원총수

7) 『72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부터 연말 종사자수도 함께 기재되고 있다.

8) 1960년대까지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10월 말 현재의 기업주 및 무급가족 종업원과 10월 말 일에 제일 가까운 최종급여계산일 현재의 피고용자재적 총수”로 조사되고도 있다(한국은행조사부, 1956c; 경제기획원·한국산업은행, 1967).

종사자수를 집계할 수 없고 직업별 제조업 인구조사만 구할 수 있는 1951, 1952, 1956, 1957, 1959, 1961년의 경우 이를 종사자수로 환산가능한 해는 환산하고 1956, 57년처럼 환산불가능한 경우는 제조업직업인구로 적고 이를 주에 밝혀두었다. 환산은 당시 부산이 경남에 속해 있었고 동일경제권이었으므로 일차적으로 당해 연도 경상남도의 제조업종사자/제조업인구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각 해당연도별로 환산 자료와 방법은 IV장에서 설명한다.

2. 통계의 선택과 수정 방법

이상의 일차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정하고 이에 맞추어 지역 통계를 검토해 나가면, 이 과정에서 지역 장기 시계열 통계를 위한 통계 선택, 수정 및 정비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첫째, 비교가능한 2000년까지의 모든 통계를 찾아 세목별 통계와 내용을 비교해 나가면서 산술적 오류, 誤植, 誤記를 찾아낼 수 있는 경우 통계를 수정한다. 그나마 부족한 부산의 통계를 수록한 일부 자료마저 행정구역의 변동, 다차례의 대화재, 보관주체의 부재로 부산시내에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3년의 시간을 들여 부산 제조업 관련 자료를 모두 구했으며 구한 자료는 모두 일일이 대조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산술적 오류는 경상남도 『도세개람』이나 경상남도 『도세일람』 혹은 『부산시사』,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등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었는데 부산시가 공식 발행한 『통계연보』도 1981, 1985, 1988년도 등 비교적 최근의 여러 곳 에까지 산술적 계산의 오류가 발견된다.

둘째, 발표처가 다른 통계, 즉 (1) 지역적으로 부산과 중앙, 혹은 경남의 통계가 다르게 존재하는 경우, 혹은 (2) 통계주체에 따라 부산시와, 상공회의소 등 다른 민간기관 등의 통계가 다르게 존재하는 경우, 부산시 발표 통계를 우선으로 채택한다. 나아가 (3) 같은 부산시 통계라도 市史 등 2차 자료보다 공식통계인 『부산통계연보』, 『상공통계연보』를 우선으로 한다. 검토 결과 일차적으로 부산시 통계, 그것도 주로 『부산통계연보』에서는 발간 이후 새로운 통계자료의 보완이나 계산상 오류 발견 등 요인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경남 혹은 전국의 통계, 혹은 민간기관의 통계는 수정되지 않았고, 또한 2차 자료들이 원자료와 통계를 일관된 기준과 검토없이 선택한 데 비해 부산시의 공식통계는 시계열 일관성에서 우수하기

때문이다. 다른 계열의 같은 항목 통계가 다른 주요 경우를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다른 계열의 같은 항목 통계가 다른 주요 경우

연도	수정, 혹은 통계 항목	다른 통계 수록지	수정통계로 채택 통계지
1962-68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①부산의 상공업(1967) ②부산상공명감(1964) ③광공업통계(1967-69)	시정백서(1969)
1966-67	부가가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1968)	상공통계연보(1969)
1969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급여액, 출하액, 재고액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1971)	부산통계연보(1977)
1969-76	생산액	①, ②부산상공업현황(부산상의, 1976, 1977) ③부산시사(1990)	부산통계연보(1977-1981)
1973	부가가치	광공업센서스보고서(1975)	부산통계연보(1978)
1974	출하액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1976)	1977 부산통계연보
1975	생산액	부산직할시30년(부산시, 1993) -다른 기준의 공장생산액 사용	부산통계연보(1981)
1976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산의 역사(부산시, 1978)	부산통계연보(1981)
1980-90	생산액	부산직할시30년(1993)	부산통계연보(1985-1998)
1990-99	연말재고액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1992-2000)	부산통계연보(1998-2001)
1991	사업체수, 종사자수	①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1992), ②부산직할시30년(1993)	부산통계연보(1999)
1993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1994)	부산통계연보(2000-2001)

셋째, 같은 발행처 계열일지라도 시기적으로 발표시기가 다른 동일 항목의 통계 값이 다르게 있는 경우, 2000년까지 대조하여 최근 발표치의 통계를 우선으로 한다. 왜냐하면 발간이후 시계열 자료의 경우 통계가 수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정은 1960년대 이후 발견되는데 수정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동일 발행처 혹은 동일계열 통계의 수정 내용

연도	수정내용	원 통계 수록지	수정 통계 수록지
1960	종사자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종합보고서(1961)	광공업센서스보고서 시리즈 I (1967)
1968	부가가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1970)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1972)
1978	생산액	부산통계연보(1981)	부산통계연보(1982)
1984	부가가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1986)	부산통계연보(1988, 1989, 1993) 1차, 2차, 3차에 걸쳐 수정
1986	사업체수	부산통계연보(1989)	부산통계연보(1991)
1987	사업체수	부산통계연보(1990)	부산통계연보(1991)
1990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부산통계연보(1993)	부산통계연보(1995-1998)
1990	급여액	부산통계연보(1993)	부산통계연보(1997-1998)
1990	유형고정자산액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1992)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1994-1998)

넷째, 횡단면 통계값과 시계열 통계값의 차이가 나는 경우 시계열 일관성을 우선으로 한다. 왜냐하면 지역 장기 시계열 통계의 경우 통계의 기준과 작성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 기준과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시계열 자료가 더 우성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962-68년의 직업 제조업 인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등은 『시정백서』(1969), 『상공통계연보』(1969), 『부산의 상공업』(1967), 『광공업센서스보고서시리즈』(1964), 『부산상공명감』(1964),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1967),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1968),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1970) 등에서 각각 다른 기준으로 수치들이 발견되나, 1962-68년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공업생산액은 시계열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시정백서』(1969)를 우선으로 하고, 이어 수정값 우선의 기타 자료 순으로 검토해 최종 수정한다.

다섯째, 가장 최근에 가까운 시점에서 장기의 시계열 통계를 찾다고 해도 이를 모든 각각의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통계와 변화과정을 비교하면서 통계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후에 발간된 통계가 수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정 이전의 어느 통계에서 이 수치가 사용되고 있거나 아니면 수정값이 사용되다 다시 수정 이전 수치로 환원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 전년도에 수정된 통계가 순전히 통계작성자의 무성의로 다시 수정되지 못한 이전 통계로 재수록되고 다시 이후 통계작성자에 의해 이것이 지속되어 기록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상당한 시

간이 경과한 후 다시 오래 전의 통계로 돌아가 수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그 동안의 통계 오류를 통계작성자가 발견하여 원래의 정값으로 수정하는 경우와, 위에서 애기한 대로 수정값이 있음에도 통계작성자가 수정전의 값을 기록한 경우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한 예로 1984년 부가가치의 경우 1986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2,311,983백만원으로 실려 있지만 1988년 『부산통계연보』에서 정정되었다가 다시 1989년 『부산통계연보』에서 2,311,983백만원으로 재수정되고 1993년 『부산통계연보』에서는 또 다시 88년값으로 정정된다. 이 경우 1988년, 93년 값이 정값이 된다. 부산시가 발행한 『부산시사』나 『부산광역시 20년사』 등에서도 수정전 통계가 다시 수록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여섯째, 시계열, 혹은 횡단면 자료간의 비교를 통해 명백히 조작되거나 잘못된 통계의 경우 이를 바로 잡거나, 수정오차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합리적인 값을 밝혀 둔다. 예컨대 1954년 대한상공회의소(1955) 전국 조사의 경우 대상을 '10인 이상 혹은 반년간 영업세납액 25,000환 이상으로 하고 업종에 따라 예외가 있다'고 적고 있는데, 영업세납액 기준 포함과 업종별 예외라는 조건, 그리고 기존의 5인 이상 업체가 다수 응답한 것으로 인해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체 조사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규모별 환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단순히 10인 이상으로 볼 경우 1953년에 비해 54년에 10-49인 규모가 갑자기 너무 커졌다가 56년에 다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작아지지만, 이에 대한 어떤 경제, 사회적 이유도 없다. 이를 5-49인으로 보면 5-49인 제조업체수, 종사자수 추세와 맞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954년의 경우도 사실상 예년의 5인 이상 조사와 유사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밝혀 두었다. 그리고 『단기 4294년 編纂 市勢一覽』(부산시)에 기록된 1960년 12월 31일 현재의 직업별 제조업 인구는 『제1회 경남통계연보』(1961)에서 "4293년(1960)은 국세조사결과가 정부에서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4292년(1959)말 상주인구 조사에 의하였음"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숫자와 전부 일치한다. 부산시가 통계를 실을 때 전년도 통계를 연도만 바꾸어 사용한 것이므로 바로 잡았다.

일곱째, 통계시점은 12월 31일 혹은 이와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1959년처럼 직업별 제조업인구를 환산할 때 월별 합리적 환산이 가능한 경우 연말 기준으로 환산하고, 환산 偏倚가 커진다고 생각되는 경우 연말에 가장 가까운 통계를 그대로 선택기록한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통계의 유량(flow)시점은 4월 기점에서 1960년부터 1월 1일 기점으로 바뀌었고, 저량(stock) 시점 역시

1960년부터 3월 31일 기준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전에 발견되는 1953, 55, 58년 일부 통계(한국은행 조사부, 1955a; 한국은행 조사부, 1956a; 한국산업은행, 1959)의 경우, 1953년은 9월 20일, 55년은 10월 31일, 58년은 부가가치, 출하액, 자본형성은 58년 4월 1일-59년 3월 31일, 기타는 59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 조사시점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모든 통계는 반드시 조사시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으로 1958년의 통계는 『단기 4290년 市勢一覽』과 『단기 4292년 市勢一覽』에서 모두 찾을 수 있으나 전자는 3월 31일 조사이며 후자는 12월 31일 조사로 다르다. 1947년 경남 사업체수는 1949년 『조선경제통계요람』에서 47년 10월 통계를 얻을 수 있고 1949년 『경제연감』에서 48년 1월 통계를 얻을 수 있어 48년 1월 통계를 사용한다.

여덟째, 통계의 추출 방법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생산을 중심으로 추출한다. 지출, 분배보다 생산소득, 생산계정 비교가 통계확인, 검증이 용이하고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사실 장기 시계열로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 통계는 분배 데이터를 구하기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시장, 노동, 위생, 경찰 업무 관련 통계와 공업 조사 통계에서 노동자수, 제조업체수 등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경우 공업생산 통계를 이용한다.

아홉째, 위의 어느 기준에도 맞지 않고 통계의 우성을 입증할 수 없는 복수의 통계가 존재할 경우 높은 값을 사용한다. 장기 시계열의 경우 해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통계는 조사지역, 조사품목의 한계로 과소평가되어 있다. 나아가 한국은행 역시 조사 유의사항에서 밝히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 확인되듯이 “일반적으로 말하여 이 통계는 적게 표시되는 경향이 있기”(한국은행, 『단기4288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 조사종합보고서』, 1956, 서문) 때문이다. 따라서 우성을 알 수 없는 통계가 복수로 발견될 경우, 溝口敏行, 梅村又次 추계(1988)처럼 높은 값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⁹⁾

마지막으로 불변가격은 현 기준인 2000년 기준으로 56년간 작성하였고 제조업 생산관련 불변가격을 구하는 것이므로 GDP 디플레이터가 아닌 생산자 물가지수를 구해 적용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장기 시계열 자료에 의존해 만들었다.

9) 이 경우는 극히 소수 예외적 경우에 속하므로 사실상 무시할 수 있다.

Ⅲ. 광역 통계의 환산

우선, 환산의 대상 변수는 전국과 경남의 통계가 있을 경우 경남의 통계를 환산하는 것이 오차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경남의 통계를 우선으로 환산한다. 환산변수 기준은 제조업 종사자 비율로 한다. 이유는 앞의 통계 대상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광공업 조사도 그렇고,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한 것도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한 사업체조사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도 구할 수 있는 비교가능한 기간에 환산기준으로 사용가능한 면적비, 인구비, 종사자수비를 각각으로 계산했을 때 종사자수 비율이 가장 좋은 근사값을 보여 주었다.

먼저 경남 일부 항목 통계는 구할 수 있지만 부산값은 구할 수 없는 연도의 부산/경남 종사자수 비율을 구해보자.

1947년은 1949년 판 『경제연감』(조선은행)에서 연말 부산/경남 직업별 제조업 인구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부산과 경남의 종사자 비율이지만 47년의 경우 두 가지 이유로 이 값을 대(proxy)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첫째, 1947, 48년 초 조사에서는 제조업 인구와 제조업 종사자가 조사방법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1948년 1월 집계에서 광업 11개, 운수 173개, (비광공업) 회사 51개를 따로 집계하여¹⁰⁾ 사업주를 제외하고 구한 경남 제조업 종사자수는 사업주를 고려하면 공업인구와 매우 유사하다. 둘째는 양 값을 구하여 비교할 수 있는 연도를 전부 비교해 본 결과 1955년까지는 부산/경남 제조업 종사자 비율과 부산/경남 직업별 제조업 인구 비율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949년의 경우는 상공부의 『단기 4283년도판 공장·광산명부』(1950)에서 부산/경남 제조업 종사자 비율을 구할 수 있다.

1950-52년의 전시기간 중 부산 제조업 종사자 통계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1951년과 52년의 경우는 부산의 직업별 인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용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1952년 말 경남 제조업 직업인구는 65,814명인데¹¹⁾ 경상

10) 분류가 공업, 광업, 운수, 회사로 되어 있어 회사는 비광공업 회사이다. 조선은행(1949), 『경제연감』, 1949년판, IV-178.

11) 『단기 4285년 도세개람』(경남, 1953)의 1952년 경남 공업인구는 57,144 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도세개람』 한 달 후 발행된 『大韓年鑑 4286年版』(대한연감사, 1953)에서 65,814명으로 수정되고 다음해 발행된 『韓國年鑑』(嶺南日報社, 1954), 그리고 『단기4288 經濟年鑑』(한국은행 조사부, 1955)은 수정수치를 싣고 있다.

남도의 『단기 4285 도세개람』 자료에 의하면 1952년 5인 이상 제조업 종사자는 32,230명이다. 통상적으로 제조업 직업인구가 제조업 종사자수보다 적지만 1952년은 (1) 전쟁 중이어서 경남에 들어 온 생계형 공업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2) 나아가 전쟁복구 이전으로 주로 영세 5인 이하 사업체가 많아 5인 이상 종사자 사업체 집계의 종사자수가 더 적었다. 여기에서 1952년 경남의 5인 이상 제조업 종사자수/제조업직업인구 비율 0.4897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단기 4284년 도세개람』(경상남도, 1952)에서 구한 51년 경남 직업별 제조업 인구를 5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수로 환산하고 또 1962년 이전 부산은 경남에 속해 있었으므로 이 비율은 부산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제 부산의 1951년 말 직업별 제조업 인구는 『단기 4284년 도세개람』(경상남도, 1952)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환산비율을 이용하여 부산의 제조업 종사자수를 구한다. 1952년 경우는 제조업 인구를 『단기 4285 도세개람』(경상남도, 1953)에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실린 경남(부산포함) 제조업 직업인구 57,144명이 차후에 65,814명으로 정정되었으므로(주 11 참조) 부산도 같은 비율로 정정한 후 정정된 제조업 인구에서 역시 제조업 종사자수를 환산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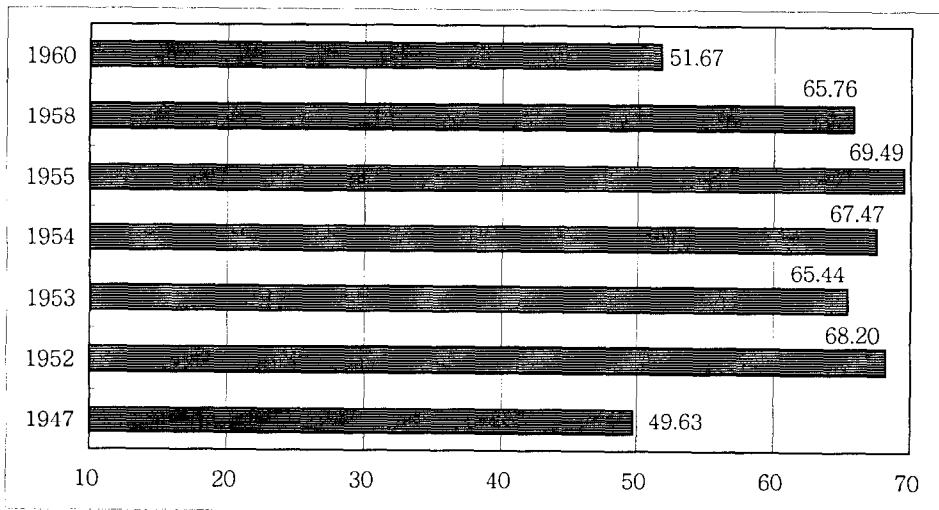
1954년은 전후 복구프로그램이 시작되지만 이는 전국적인 공통 현상으로 부산과 경남에 각각 차별적으로 충격을 주었을 다른 경제적 충격변수가 없었으므로 부산/경남 비율의 증가가 추세선을 따라 나타났으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치를 구할 수 없는 1954년은 1953년과 1955년의 환산값 평균을 선택한다.

우선 1953년 값을 구해보자. 이미 지적했듯이 1940-55년 제조업 종사자수 비율과 직업별 제조업 인구비율은 유사하므로 1953년은 연말 직업별 제조업 인구비율을 이용한다. 1955년은 10월 31일 현재값으로 부산, 경남의 총종사자수를 『단기 4288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종합보고서』(한국은행)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한 1955년 경상남도의 종사자수는 1966년 『광공업센서스보고서』(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에서 수정되고 있는데 정정값은 0.4%로 차가 적고 부산값은 알 수 없으므로 같은 비율로 정정되었다고 보고 55년 비율은 동일한 기준으로 추계한 값을 이용한다. 이제 양 연도 값을 이용하여 1954년의 환산비율을 구할 수 있다. 1958년의 경우 직업별 제조업 인구와 5인 이상 제조업 종사자수를 『단기 4292년 도세일람』(경상남도)과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종합보고서 1958』(한국산업은행)에서 구할 수 있다.

불황의 바닥이었던 1960년은 제조업 종사자수를 구할 어떤 통계도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부산과 경남의 사업체수를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 종합보고서, 1960』(상공부, 한국산업은행, 1961)과 『1961 전국광업 및 제조업사업체 표본조사보고』(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62)에서 얻을 수 있다. 원래 부산은 경남에 비해 대규모 노동집약 공장이 많으므로 부산/경남 종사자수 비율이 사업체수 비율보다 높지만, 1959-60년의 경우 부산의 중심적인 노동집약산업인 3白産業의 몰락이 진행되어 사업체수 비율을 종사자수의 대변수로서 1960년에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부산의 제조업 직업인구는 이 시기 감소했다(부산시, 『단기 4292년 市勢一覽』, 1959; 부산시, 『단기 4294년 編纂 市勢一覽』, 1961; 부산시, 『통계연보』, 1962).

이상을 종합하여 부산시 독립 이전 경남통계량만 나온 시기의 부산/경남 제조업 체 종사자수 비율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소수 두 자리까지 계산한 절대 의미는 없다.

〈그림 1〉 부산-경남 제조업 종사자수 비율(%)



자료: 뒤 참고자료의 전 자료.

구해진 부산/경남 제조업 종사자 비율을 경제적 의미로 검토해 보자.

부산과 경남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1947년에 낮은 것은 해방직후의 귀환이 일

단락되면서 인구가 주위지역으로 분산되어 나가고 이에 따라 부산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1952년 비율이 급등한 것은 戰場이 북상하면서 초기 전시 혼란과 원료 부족 등을 극복하기 시작했고 부산은 전쟁 수행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반해, 경남은 기초 생활재 공장과 관련 공업인구가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3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약간 하락하는 것은 전쟁상태가 종료되고 5인 이상 제조업체가 느는 등 대규모 제조업체들은 정상화되기 시작하지만, 동시에 전국 지역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부산의 피난인구 및 영세공업이 다시 경남으로, 경남은 전국으로 분산되어 나가 상대적으로 부산은 경남에 비해 줄었기 때문이다. 사실 終戰으로 부산의 대표 공업인 고무공업의 중요성이 감소하였고 부산의 5인 이하 영세공업 인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회귀하면서 부산의 제조업 직업인구 감소율은 54.3%로 경남의 감소율보다 컸으며(경상남도, 『단기 4287 도세개람』, 1955) 당시 언론은 ‘구매력이 급속히 감소하여 부산의 황금상권인 국제시장 점포 권리금이 종전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할 정도였다(『국제신보』, 1953. 8. 21).

1958년에는 불황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불황이 부산의 제조업에 미친 영향은 아직 크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부산의 공업인구는 1958년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부산시, 『市勢一覽』, 1958-59; 경상남도, 『도세일람』, 1959) 그 결과 부산/경남의 제조업 종사자비는 위에서 보았듯이 65.76%로 낮은 속에서도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후 불황은 크게 확대되었고 특히 1960년의 불황저점(trough)에서 三白産業 중심의 부산은 다른 경남지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끝으로 1961년 생산액, 부가가치, 출하액, 연말재고액, 생산비, 유형고정자산액은 경남값도 구할 수 없지만 한국산업은행 조사부의 『1961 전국광업 및 제조업사업체 표본조사보고』(1962)에서 전국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역시 부산과 전국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을 구해 환산한다.

IV. 통계의 현황과 정비과정: 작업의 내용

모든 기간에서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급여액은 모든 급여를 다 합하되 퇴직급여금은 제외하고 더했다. 재고액은 완제품과 半제품, 재공품 재고액을 전부 더하되, 원재료 및 보조재료, 연료는 제외하여

구했다. 생산비는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유형고정자산 연말잔액은 건설가계정을 제외하고 합계한 것인데 고정자산으로 나와 있는 것은 유형고정자산만 새로 합계했다. 통계정비의 방법은 'Ⅱ 장. 통계정비의 방법'과 'Ⅲ 장. 광역통계의 환산' 방법에 따라 하였다.

이제 각 연도별로 존재하는 통계의 실질 현황과 이에 기초하여 작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고가 정비대상으로 하는 9개의 항목 중 해당되는 부분은 전부 연도별로 지적하였으며 거론된 통계자료에서 거론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은 존재하지 않거나 환산이 불가능한 항목이다. 'Ⅱ 장. 통계정비의 방법'에 따라 수정된 후년도 시계열 통계가 正 값이므로 연도는 2000년부터 역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지면을 줄이기 위해 부산시발행, 『부산통계연보』는 『통계연보』로, 경제기획원 혹은 공동발행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는 『광공업통계』로 쓴다. 연도만 나오는 것은 바로 앞의 통계자료를 의미한다. 또한 지면 관계상 'Ⅱ 장'에서 지적한 방법에 따라 채택이 기각된 많은 오류통계자료들은 기록을 생략한다.

1990년대 이후 통계는 시계열로 비교적 잘 갖추어 있어 수정확인 대조가 용이하다. 1993-2000년의 9개 항목 시계열 통계는 『통계연보』의 2001년판에서 얻을 수 있다. 1993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수정통계채택 원칙에 의해 선택했다. 1992년의 각 항목은 『통계연보』의 2000년판에서, 1991년 항목은 『통계연보』 1999년판에서 구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1994)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1992), 『부산직할시 30년』(1993) 등에서 일부 다른 통계를 발견할 수 있으나 'Ⅱ 장'에서 지적한 대로, 후에 수정되고 시계열 일관성을 유지하며 부산시가 발행한 1차 통계집 통계를 선택했다. 1990년의 모든 통계는 『통계연보』 1998년판에서 구했는데 급여액은 1997년도판 이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액은 1995년도, 유형고정자산연말잔액은 1994년도판 이후 수정된 수정값으로 선택됐다. 1990, 91-92, 96, 99년의 연말재고액 역시 정정값 우선, 부산시 통계 우선에 따라 선택한 것이다.

1988-89년 9개 항목 중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의 기본 3항목은 『통계연보』(1993)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액, 급여액, 출하액, 재고액, 생산비, 유형고정자산액의 6 항목은 1989년은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1991)에서, 88년은 『산업센서스보고서(하권)』(1990)에서 얻을 수 있다. 역시 1984-87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의 기초 3항목은 『통계연보』(1993)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광공업통계』 각 년도와 한국은행 부산지점(1995)과 일치한다. 1984년 부가가치는 3회 수정된 『통계연보』 1993년판 최종 수정값을 채택했다. 1986-87년 사업체수는 각각 수정된 1991년판 정정값을 사용하였다. 198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는 『통계연보』(1988)에서 구할 수 있고 생산액, 급여액, 출하액, 재고액, 생산비는 『산업센서스보고서(상권)』(1985)에서 구할 수 있다. 한국은행 부산지점(1995)은 일치한다. 나머지 1983년 유형고정자산은 『산업센서스보고서(하권)』(1985)에서 찾을 수 있다. 1981-82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는 『통계연보』(1986)에서 구했고 기타 5 항목은 81년, 82년 각각 『광공업통계』 1983년판과 1984년판에서 구했다.

1979-80년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출하액, 생산비는 『통계연보』 1984년판과 1985년판에서 구했는데 『광공업통계』의 각 년도와 일치한다. 79년, 80년의 기타 3 항목 통계는 『광공업통계』의 1981년판과 1982년판에서 각각 구했다.¹²⁾ 1978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출하액, 생산비는 『통계연보』(1982)에서, 급여액, 재고액은 『광공업센서스보고서(상권)』(1980)에서 얻을 수 있으며, 유형고정자산액은 『광공업센서스보고서(하권)』(1980)에서 구할 수 있다. 생산액은 1981년판의 수정수치이다. 1977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출하액, 생산비는 『통계연보』(1982)에서, 기타항목은 『광공업통계』(1979)에서 얻을 수 있다. 1974-76년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출하액, 생산비는 『통계연보』(1981)에서 구했고, 기타는 『광공업통계』의 각 해당연도에서 구했다. 1974년 출하액은 『통계연보』(1977)에 오기되어 있다. 1973년 통계는 부산시 통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제외한 8개 항목은 『광공업센서스보고서(시리즈 I, II)』(1975) 양권에서 구했다. 부가가치는 『통계연보』(1978)에서 『광공업통계』 값이라고 밝히고 사업체수, 종사자수와 함께 기록되었는데 부가가치만 정정값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채택하였다. 1970-72년, 1974년은 다수 이질적 통계가 존재하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와 일치하고 시계열 일관성을 유지하는 『통계연보』의 최근값 각 해당연도 통계를 사용했다.

1969-74, 1978년의 종사자수는 사업주, 무급종사자를 연말 수치로만 얻을 수 있어 이를 합산한 것이다. 1969-73년 이후 생산비 통계는 각 해당연도 『광공업통계』

12) 1980년 통계는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2권(1990), p.1146에서도 『광공업통계』 출전으로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가 나오나 정정 이전값이 기록되어 있다.

에서만 발견되는데 우선 『통계연보』에서 수정값을 찾은 다음 발견되지 않는 경우 모두 여기에서 구했다. 1969-76년의 생산액은 <표 2>에서 보았듯이 이질적 값을 찾을 수 있으나 역시 후년도 발행 정정된 해당 『통계연보』 통계로 집계하였다. 1969년의 생산비, 연말재고액을 제외한 7개 항목 통계 역시 후에 정정된 『통계연보』(1977) 통계를 이용했다.¹³⁾ 구하지 못한 1969년의 생산비, 연말재고액은 『광공업통계』(1971)에서 구했는데 1967년과 1969년 재고액은 『광공업통계』, 1969년판, 1971년판에서 10인 이상 통계를 구해 재고액과 재고증감비율을 이용해 환산했다.

1962-68년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은 앞서 II 장, 2절에서 지적했듯이 다수의 이질값들이 발견되나 (1) 부산시 통계 우선 (2) 수정최근값 우선 (3) 시계열 연속성 우선의 통계정비방법에 따라 부산시가 공식통계로 정정해 발표한 시계열 자료인 『시정백서』(1969)에서 구했다. 1962-68년의 사업체수, 종사자, 생산액, 부가가치를 제외한 기타 통계 각각은 중소기업은행의 『광업제조업 사업체 조사보고』(1963)와 『통계연보』 혹은 『광공업센서스보고서 시리즈 I』의 각 연도에서 구했다. 1968년 재고는 총재고세목을 합산한 액으로 구했고 부가가치는 1972년판 『광공업통계』에서의 정정값으로 했으며 1966-67년의 부가가치는 (1) 부산시 통계 (2) 수정최근값 (3) 큰 값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공통계연보』(1969) 값을 채택한다.

1960-70년대 전반의 『통계연보』 역시 종사자나 사업체 등 매우 한정적 통계만 신고 있지만 그나마 이도 1962년부터 발행되었으므로 부산시의 62년 이전 통계는 단절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1961년의 사업체수는 부산상공명감(1962)의 사업체에서 4인 이하를 제외하고 합산한 것이다. 종사자수는 『부산상공명감』(1962)에서 전 사업체를 더함으로써 구할 수 있으나 부산상공회의소 집계로 종사자 기준의 일관성이 단절되어 있으므로 『통계연보』(1962)에서 구한 1959-61년 제조업 직업인구감소를 적용하여 환산했다. 사업체수, 종사자수를 제외한 기타 1961년 통계는 한국산업은행의 『전국광업 및 제조업사업체 표본조사보고』(1962)에 나온 전국통계를 종사자비율로 환산해 구했다. 1960년 통계는 상공부, 한국산업은행의 『광업 및 제조업사업체조사종합보고서』(1961)에서 구한 경상남도 값을 'III 장. 광역 통계의 환산'에서 구한 비율에 따라 환산하였다. 이때 경남의 종사자수가 『광공업센서스보고서 시리즈 I』(1967)에서 정정되었으므로 정정된 경남수치를 이용해 환산했다.

13) 부산광역시, 『부산시사』(1990)는 수정되지 않은 부가가치 액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1959년의 종사자수는 『도세일람』(1959)과 『경남통계연보』(1961)에서 구한 59년 제조업 직업인구 감소율을 매달 균등하게 나누어 환산하였다. 1958년 통계는 생산액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산업은행(1959)에서 구했다. 생산액은 경상남도(1963)에서 경남액과 대조해 확인한 59년 3월 통계를 이용한다. 출하액은 중분류 합계를 더하여 구한 경남의 출하액을 역시 III장에서 구한 환산비율로 환산한 것이다. 1956-57년의 종사자수 통계는 『도세일람』(1957)과 『도세일람』(1958)에서 구한 제조업 직업인구를 일단 기록하고 주로 표시했다. 1957년 재고액은 『경상남도지(중)』(1963)에서 구했다. 1957년 부가가치는 한은조사부(1959)에서 1957, 58년 전국 부가가치율을 구하고, 그 변화율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종합보고서』(1959)에서 구한 부산의 58년 부가가치율값에 적용해 구한, 57년 부가가치율로 계산해 구했다. 1956-57년의 급여액은 『경제연감』(1958)에서 구한 연간 제조업 상용노무자 1인당 급여액에 종사자수를 곱해 구한 것이다.

1956-57년의 사업체수는 『경남도세개람』(1957)에서 구할 수 있는 56-58년 부산 공장수를 한국산업은행(1959)에서 구할 수 있는 58년 사업체, 공장 비율을 이용해 환산한 것이다. 이 방식은 한국은행(1956b)에서 구한 1955년 값에 검산한 결과 매우 합리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54, 1956-57년의 생산액은 55년값을 이용해 한국은행(1958)에서 구한 제조업 생산지수 1954-57년 값을 환산한 것이다. 1955년의 생산액은 경상남도(1963)에서 구한 값을 III장에서 구한 환산비율로 구했다. 한편 1955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한국은행(1956b)에서 10월 31일 기준으로 합계한 것이다. 1954년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III장에서 구한 환산값으로 경남값을 환산했다. 경남의 사업체수는 대한상공회의소(1955)에서 구했고 종사자수는 역시 같은 자료에서 구한 전국과 경남 제조업체수와 전국 종업원수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1953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한국은행(1955a)에서 구한 경남 증가율을 부산에 적용한 것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1962년까지 부산은 경남에 속해 있고 같은 경제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1952년의 사업체수는 경남제조업체를 III장에서 구한 값으로 환산한 것이다. 경남통계는 『도세개람』(1953)에서 관영공업 사업체 종업원 비율 2.71%로 관영공업 사업체수를 역산하여 구했다. 1952년의 종사자수는 『도세개람』(1953)에서 구한 공업인구를 환산했다. 그런데 앞의 III장에서 지적했듯이 1952년 경남의 공업인구가 정정되고 있어(주 11 참조) 우선 부산도 똑같은 비율로 정정한 후, 정정한 값에 한국은행(1955a)에서 구한 경남 공업직업인구와, 『도세개람』

(1953)에서 구한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간의 비율을 이용해 환산했다. 1951년의 종사자수는 『도세개람』(1952)에 나와 있는 1951년 말 부산 직업별 공업 인구를 제조업(5인이상) 종사자수/공업인구 비율로 구한 것이다. 환산비율은 한국은행(1955a)과 『도세개람』(1953)에서 52년 값으로 구했다. 1951년의 사업체수는 경남의 1952년 종사자/사업체 비율을 이용해 환산했다. 경남사업체수는 『도세개람』(1953)에서 관영사업체수(16)를 관영, 총 종사자 인원비를 이용해 계산했다. 1950년의 통계는 전쟁으로 없다.

마지막 단계로 1940년대 통계를 구하자. 1949년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상공부(1950)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장이 부산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모두 더하였다. II 장 통계정비의 방법에 따라 4인 업체 1개가 포함되었다. 1945년과 1948년의 사업체수 환산방법은 II 장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기준 환산 회사수와 환산비율은 조선은행(1948)과 조선은행(1949)에서 구했다. 1947년의 경우 조선은행(1949)에서 구한 경남값을 III장에서 구한 비율로 환산했다. 1946년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II 장 통계정비의 방법에 따라 조선은행(1948)에서 1-4인 사업체 21개를 포함하고 전매, 관영공장, 휴업장을 제외하여 합산으로 구했다. 단 종사자수에서는 事業主數를 구할 수 없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그 수는 375명 정도로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V. 정비 제조업 통계와 의미

이상의 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부산의 장기 시계열 제조업 통계를 각 년도별로 經常價格과 2000년 不變價格으로 정비하면 <표 4>, <표 5>와 같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일차적으로 부산지역 제조업 통계를 3년에 걸쳐 총정리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원래 목적상, 그리고 학회지의 지면 한계상 <표 4>, <표 5>의 통계를 이용하여 부산의 제조업을 자세히 설명하는 일은 다수의 추가 연구로 미룬다. 다만 <표 4>를 중심으로 <표 4>와 <표 5>에서 부산 제조업의 변곡점이 되는 시기와 문제가 되는 특징적인 시기, 그리고 통계적으로 단층 의문점이 제기되는 시기의 경제적 상황을 간단히 검토해 보자. 이를 통해 기존 인식에 대한 몇 가지 검증과 문제제기 그리고 추가적인 연구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표 4〉 부산 제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급여액 (개, 명, 백만 원)

	사업 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급여액 (연)	
			경상가격	불변가격	경상가격	불변가격	경상가격	불변가격
1945	336	-	-	-	-	-	-	-
1946	375	12,873	-	-	-	-	-	-
1947	416*	14,252*	-	-	-	-	-	-
1948	444	-	-	-	-	-	-	-
1949	379	16,909	-	-	-	-	-	-
1951	374	20,462	-	-	-	-	-	-
1952	402*	21,980	-	-	-	-	-	-
1953	465	25,787	-	-	-	-	-	-
1954	704*	34,748*	4,240	419,508	-	-	-	-
1955	744	37,650	5,109*	279,100*	-	-	-	-
1956	815	(15,820)	6,079	252,433	-	-	722	29,989
1957	890	(16,218)	7,969	284,713	2,396	85,610	851	30,405
1958	1,003	40,493	8,043	306,329	2,480	94,447	970	36,936
1959	-	38,090	-	-	-	-	-	-
1960	1,423*	33,454*	7,545*	252,866*	2,742*	91,919*	727*	24,353*
1961	1,414	35,961	7,944**	234,880**	2,675**	79,101**	-	-
1962	1,397	44,282	17,909	484,365	6,555	177,286	1,797	48,601
1963	1,312	53,655	22,658	508,285	9,537	213,943	2,790	62,588
1964	1,525	51,422	33,176	552,512	-	-	-	-
1965	1,699	77,179	41,040	621,481	22,941	347,403	-	-
1966	1,764	80,033	50,901	708,128	28,313	393,887	6,953	96,729
1967	1,721	100,392	98,248	1,284,595	36,003	470,740	9,963	130,266
1968	1,855	117,435	131,905	1,594,972	44,975	543,830	13,678	165,392
1969	2,164	141,022	173,732	1,968,069	56,060	635,058	18,177	205,912
1970	2,076	137,316	222,148	2,305,709	82,260	853,790	22,127	229,660
1971	1,934	137,744	272,305	2,601,688	94,286	900,838	25,049	239,326
1972	2,326	164,517	370,001	3,101,987	132,698	1,112,504	34,414	288,518
1973	2,020	191,406	627,608	4,919,880	187,767	1,471,924	50,329	394,534
1974	1,990	219,789	907,310	5,004,711	268,771	1,482,538	74,673	411,895
1975	2,527	250,673	1,100,340	4,798,598	319,554	1,393,579	108,101	471,430
1976	2,799	312,466	1,693,532	6,587,273	544,117	2,116,433	173,399	674,464
1977	3,047	348,953	2,167,422	7,733,279	702,668	2,507,093	253,058	902,901
1978	3,282	369,045	2,878,940	9,195,423	1,031,186	3,293,640	358,499	1,145,057
1979	3,508	350,860	3,527,655	9,492,667	1,190,917	3,204,672	448,740	1,207,527
1980	3,631	319,077	4,109,069	7,954,745	1,317,589	2,550,720	385,260	745,825
1981	4,051	335,962	5,101,757	8,203,762	1,624,307	2,611,929	605,835	974,199
1982	4,653	344,514	5,458,607	8,386,050	1,708,479	2,624,734	702,924	1,079,901
1983	4,633	355,372	6,199,358	9,508,266	2,073,476	3,180,194	772,200	1,184,362
1984	4,870	351,678	6,984,803	10,634,241	2,302,453	3,505,445	868,241	1,321,882
1985	5,198	368,117	7,568,994	11,423,821	2,474,322	3,734,474	946,600	1,428,696
1986	5,731	410,806	8,956,206	13,717,329	2,935,610	4,496,181	1,123,200	1,720,294
1987	6,231	430,858	10,364,891	15,802,383	3,362,214	5,126,054	1,417,500	2,161,130
1988	6,544	412,379	11,174,789	16,584,883	3,669,279	5,445,701	1,601,700	2,377,137
1989	6,853	383,379	11,339,409	16,587,525	3,977,618	5,818,543	1,836,800	2,686,910
1990	7,066	367,585	13,509,254	18,969,770	5,426,383	7,619,757	2,046,482	2,873,682

1991	7,002	312,819	13,703,811	18,363,412	5,974,041	8,005,348	2,162,763	2,898,151
1992	7,618	283,286	13,736,052	18,024,819	5,946,593	7,803,280	2,195,279	2,880,705
1993	9,250	264,979	14,409,594	18,624,013	6,314,456	8,161,265	2,275,210	2,940,648
1994	9,294	245,218	15,405,868	19,390,422	6,548,192	8,241,808	2,321,609	2,922,067
1995	9,537	232,566	17,487,975	21,020,546	7,797,828	9,372,989	2,539,387	3,052,343
1996	9,488	219,798	18,083,210	21,062,033	8,044,521	9,369,684	2,712,910	3,159,804
1997	8,958	198,863	17,695,440	19,841,342	7,435,350	8,337,025	2,658,044	2,980,381
1998	8,215	174,054	17,441,202	17,426,704	7,535,976	7,529,712	2,189,506	2,187,686
1999	8,652	185,612	18,191,324	18,561,945	7,999,522	8,162,500	2,429,223	2,478,715
2000	8,983	184,647	19,061,393	19,061,393	8,257,379	8,257,379	2,603,234	2,603,234

자료, 주: 1) 년도별 자료와 정비내용은 IV장. 통계의 현황과 정비과정 참조. 2) *은 경상남도 값을 환산, **는 전국값을 환산. 3) 1946: 11월 현재. 4) 1947: 1948년 1월 현재. 5) 1953: 9월 20일 기준. 6) 1954: 10인 이상 혹은 반년간 영업세납액 2,500원 이상으로 하고 업종에 따라 예외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사업체 조사로 간주됨(II장 참조). 7) 1955: 10월 31일 기준. 8) 1956-57: 종사자수()은 직업별 제조업인구수. 9) 1958: 생산액을 제외하고 모두 59년 3월말, 부가가치, 출하액, 자본형성은 58.4-59.3 기간 중.

〈표 5〉 부산 제조업 출하액, 재고액, 생산비, 유형고정자산 (백만 원)

	출하액		연말재고액		생산비		유형고정자산연말잔액	
	경상가격	불변가격	경상가격	불변가격	경상가격	불변가격	경상가격	불변가격
1957	-	-	784	28,006	-	-	-	-
1958	6,926*	263,788*	951	36,229	5,563	211,883	-	-
1960	7,531*	252,405*	714*	23,921*	4,788*	160,486*	3,138*	105,167*
1961	7,802**	230,682**	1,077**	31,856**	5,269**	155,779**	-	-
1962	21,286	575,699	2,741	74,133	18,429	498,429	7,397	200,058
1963	29,633	664,754	4,194	94,084	20,715	464,698	-	-
1966	71,085	988,926	13,352	185,751	46,828	651,465	29,319	407,882
1967	109,346	1,429,702	18,148	237,286	79,749	1,042,720	-	-
1968	138,193	1,671,006	20,474	247,568	96,033	1,161,214	54,652	660,842
1969	170,335	1,929,587	27,287	309,112	120,416	1,364,095	-	-
1970	216,400	2,246,050	35,152	364,848	139,888	1,451,920	-	-
1971	266,552	2,546,722	44,450	424,689	178,018	1,700,840	-	-
1972	368,938	3,093,075	43,665	366,075	237,303	1,989,483	-	-
1973	596,987	4,679,839	81,254	636,958	418,341	3,279,415	233,448	1,830,021
1974	866,714	4,780,784	157,903	870,991	638,539	3,522,174	-	-
1975	1,061,797	4,630,511	205,340	895,491	780,786	3,405,018	-	-
1976	1,663,162	6,469,144	244,501	951,027	1,149,414	4,470,836	-	-
1977	2,136,569	7,623,197	294,558	1,050,972	1,464,754	5,226,187	-	-
1978	2,852,324	9,110,410	358,627	1,145,466	2,035,983	6,502,992	744,901	2,379,237
1979	3,423,155	9,211,465	496,066	1,334,878	2,336,695	6,287,879	987,421	2,657,079
1980	4,036,969	7,815,166	549,807	1,064,371	2,791,439	5,403,945	1,099,764	2,129,033
1981	4,981,421	8,010,258	657,810	1,057,776	3,477,450	5,591,833	1,331,959	2,141,826
1982	5,436,761	8,352,488	731,286	1,123,474	3,750,128	5,761,316	1,535,173	2,358,484
1983	6,132,791	9,406,169	814,207	1,248,790	4,633,798	7,107,088	1,634,528	2,506,958
1984	6,897,858	10,501,869	922,891	1,405,085	4,672,820	7,114,287	1,811,361	2,757,766
1985	7,586,686	11,450,523	873,337	1,318,120	5,094,672	7,689,347	1,914,275	2,889,200

1986	8,919,148	13,660,571	931,119	1,426,102	6,020,596	9,221,147	2,223,280	3,405,177
1987	10,311,344	15,720,745	1,024,928	1,562,612	7,002,677	10,676,329	2,498,873	3,809,799
1988	11,140,081	16,533,371	1,073,125	1,592,661	8,481,374	12,587,494	3,079,343	4,570,157
1989	11,196,976	16,379,171	1,186,674	1,735,892	7,361,791	10,768,982	3,497,039	5,115,542
1990	13,392,979	18,806,496	832,863	1,169,511	8,082,871	11,350,013	4,538,840	6,373,465
1991	13,566,382	18,179,254	860,953	1,153,696	7,729,770	10,358,064	4,567,116	6,120,037
1992	13,668,438	17,936,094	844,996	1,108,827	7,789,459	10,221,539	5,284,118	6,933,963
1993	14,356,989	18,556,022	795,030	1,027,555	8,095,138	10,462,748	5,803,765	7,501,210
1994	15,333,386	19,299,194	835,389	1,051,453	8,857,676	11,148,614	6,752,754	8,499,278
1995	17,338,871	20,841,323	1,012,549	1,217,084	9,690,147	11,647,557	7,033,625	8,454,417
1996	18,027,752	20,997,440	975,063	1,135,684	10,038,689	11,692,349	8,399,612	9,783,269
1997	17,655,152	19,796,169	895,005	1,003,541	10,260,090	11,504,317	7,460,789	8,365,549
1998	17,348,951	17,334,530	959,726	958,928	9,905,226	9,896,992	10,457,890	10,449,197
1999	18,134,290	18,503,749	947,430	966,732	10,191,802	10,399,445	10,714,951	10,933,252
2000	18,938,622	18,938,622	938,608	938,608	10,804,014	10,804,014	8,929,621	8,929,621

자료, 주: 1) 년도별 자료와 장비내용은 IV. 통계의 현황과 장비과정 참조. 2) *은 경상남도 값을 환산, **는 전국값을 환산. 3) 1957: 재고액은 58년 4월 말 현재. 4) 1958: 59년 3월말, 출하액은 58. 4-59. 3 기간 중. 5) 1967, 1969: 재고액은 10인 이상 재고액을 5인 이상으로 환산. 6) 81-82: 재고는 20인 이상 사업체.

우선, <표 4>에서 1949년의 경우 제조업체의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1949년은 부산에서 '홍아다이야' 공장의 본격생산 등 고무공업이 대폭 확대되고 1948년 '바터(barter) 무역'이 본격화되면서(김진엽, 1985; 최상오, 2000; 배석만, 2001) 공장가동률이 급속히 상승하였다. 해방 이후 공장이 규모를 늘릴 수 없었던 가장 큰 병목은 원료난, 자금난이었는데 '바터무역'의 본격화는 이 문제를 해소해 주었던 것이다. 그 결과 1948년부터 활발해진 중소기업주들의 경쟁과, 생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선두 사업체들의 노력으로 제조업체들간의 합병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상공부, 『단기 4283년도판 공장. 광산명부』, 1950) 사업체수가 14.6%나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동률 증가와 생산확대로 생산액은 대폭 늘었으며 종사자수는 합병과 몰락에 따른 감소요인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생산확대에 따라 증가했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50년 하반기 전쟁이라는 외생변수 발생 직후까지도 계속되었는데 이런 결과는 1949년이 부산 제조업에서 큰 분수령이었고 또 한국전쟁의 평가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기임을 보여준다.

1950-52년은 특수 戰時상황으로 부산은 '임시수도였고 전시 중 인구집중과 보급 생산의 중심으로 작용했기에 일반적으로 1951-52년 부산경제와 제조업은 매우 융성하였'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항상 지적되어져 왔다. 그러나 <표 4>에서 보면 기본적인 일반 인식과 달리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수는 1951년 정체되어 있

고 52년에도 28개가 늘어나는 등 1951-52년간 정체되어 있다. 또 종사자수로 보아도 부산 제조업의 전환기로서 5인 이상 제조업 고용이 대폭 늘었으리라 예상되는 1949년과 1950년, 그리고 전쟁 초기를 제외하고 적어도 확인되는 바 1952년에는 1,518명 증가에 그치고 있다.

물론 부산은 전시로 대규모 인구가 부산에 유입됨으로써 생존형 4인 이하 공업이 급속히 늘어나, 1951년 부산 공업 인구는 41,784명에 이르렀다(『단기 4284년 도세개람』, 1952).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부산 역시 원자재난, 자금난으로 안정된 생산기반을 갖지 못했고, 특히 부산에는 각종 외국 소비물자가 범람하면서 동시에 전시의 혼란을 틈타 대마도를 중계지로 하는 대일 밀수가 성행하여 부산의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었다(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0, p. 1105). 이런 상황은 1951년의 경우 매우 심했다. 더구나 부산은 전쟁 직전 1949년 제조업이 급팽창하고 있어서 전쟁으로 원료난 타격을 더 크게 받았다. 따라서 인구급증과 전쟁 보급기지로서의 역할 증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전시하 부산의 5인 이상 업체의 가동업체수, 종사자수는 정체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선험적 인식과 달리, 부산 경제에 대해 전시기(戰時期)를 보다 정밀하게 나누어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에서 이전 연도에 비해 51.4%, 34.8% 각각 증가함으로써 일종의 통계적 단층현상을 보여주는 시기가 1954년이다. 이러한 단층적인 높은 증가는 전국적인 공통 현상 속에서 특히 부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인데 이는 세 가지 사실에 기인한다. 우선은 전쟁이 끝나고 온전하게 맞이하는 첫 해로서 통계의 정비와 조사대상의 확대가 대폭 있었던 통계단층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전쟁이 끝나고 국내외 총력지원에 의한 복구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실질적인 제조업 활동의 단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1954년부터는 수입대체공업의 시작인 섬유공업이 이제까지 한국 공업의 중심이었던 식품공업을 추월하여 39% 생산으로 생산수위를 차지하게 되었다(한국은행 1955a). 이상의 두 요인에 의한 단층은 사실 전국적 현상이기도 하였는데 부산의 경우 특히 큰 54년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1953년에 이미 면직물 생산과 동일 수준에 이른 인견직물업에서 부산에 있던 전국 1, 2, 3위 규모 기업인 「조선견직」, 「선일직물」, 「고려직물」이 53년 7월부터 특별외화대부로 특수직기를 비롯한 각종 기기를 도입하여 부산 인견직물이 급성장을 이루었고(차철호, 2002, p. 144) 또 53년 11월에는 남한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제일제당이 설립되어 제당 관련 공업의 붐이 나타나는 등 54년의 붐을 유도했던 것이

작용했다.

〈표 4〉와 〈표 5〉에서 보듯이 1959-60년의 재고액을 제외한 연속적인 종사자수 감소 및 정체 그리고 불변가격 생산액, 부가가치, 급여액, 출하액, 생산비의 58년 대비 감소는 50년대 말 대불황에 연유한다. 특히 이 기간 중 부산이 타격이 컸던 것은 이 불황의 핵심이었던 三白産業이 부산의 대표 산업이었기 때문이다. 불황은 1958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부산에게 1958년은 대기업들의 불안 속에서도 부산의 제조업에 미친 불황의 영향이 아직 크지 않은, 경기순환 사이클의 전환 중간 시기 성격을 갖는 해였다. 그러나 1959년부터 삼백산업이 몰락하면서 이에 절대 의존하고 있던 부산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따라서 제조업 종사자수와 제조업 모든 지표들이 줄어들었다.

불황을 통과하면서 〈표 4〉, 〈표 5〉에서 보듯이 1961년 부산의 제조업체수는 정체되고 있고 생산액, 부가가치, 출하액 등 모든 지표들이 여전히 정체 혹은 감소하고 있지만 종사자수는 7.5% 증가로 급속히 늘어난다. 부산의 제조업체들이 불황에서 벗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고용에서 빨리 대응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신규자/이직자 비율은 바로 先行景氣指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은 (1) 『상공명감』에서 1961년 부산의 전 제조업 종사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과 (2) 조사방법의 차이가 일차적 원인이지만, 그래도 1962년 2배 이상 급등한 제조업 직업인구 통계(부산직할시, 『통계연보』, 1970)에서 발견할 수 있다. 동시에 경기가 회복, 활황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부산 제조업체들의 대응으로 다시 1961-63년은 사업체간 경쟁, 인수가 촉진되어 종사자수는 7.5%, 23.1%, 21.2%로 늘고 있음에도 제조업체수는 정체 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까지 1962년은 부산의 전후 최대 고도성장기(1962-72)의 시작으로 사업가들에 의해 증언되면서 그렇게 사용되어졌는데(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 30년』, 1993, p. 726), 작성된 제조업 통계는 이것이 사실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종의 단층기로, 그 원인에는 1962년 통계정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1962년이 부산 제조업의 비약기였음을 확인해 준다. 물론 종사자수도 전년 대비 21.2%가 늘지만 폭발적인 이러한 생산성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함으로써 비로소 부산시는 숙원사업으로 계속 요구해 온¹⁴⁾ 부산직할시로의 승격을 중

14) “부산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면 하루빨리 정부직할시로서.....,” 부산시, 『단기 4290년 市勢一覽』, 1958. 서문. “모든 난제를 해결하고 부산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면 하루빨리 정부

양정부로부터 얻어 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산직할시 승격은 어떤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조업 생산성과 생산의 비약적 발전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70년대 후반 한국은 중화학공업화로 공업구조의 개편이 진행됨에도 부산은 이러한 산업구조개편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1978년 이후에는 제조업 종사자수의 감소가 나타났다. 제조업 종사자가 줄고 3차 산업의 종사자가 늘어나는 소위 G7국의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 현상이 한국에서 1989년을 정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이미 부산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 10년 이상이나 앞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부산의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80년대 후반 들어 부산시의 인위적 부양으로 고용이 잠깐 늘고 있으나 역시 산업구조상의 문제로 전국적인 탈공업화시기에 앞서 다시 1987년 430,858명을 정점으로 계속 종사자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없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장기적으로 결국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시는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釜山市域 확대를 추구하였고 그 결과 1988년 시역 4.5% 증가에 이어, 89년 법률 제 4051호로 경남 김해군 녹산면, 가락면, 창원군 天加면 등을 강서구에 편입하여 다시 시역을 16.7%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역시 사업구조 등 질적 변화가 아니라 인위적 양적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어서 다시 90년대 들어 부산경제의 침체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1998년에는 제조업 종사자수가 174,054명으로 정점인 87년에 비해 59.6%나 감소하고 있다. 1999년 이후 부산은 지역자치시대로 자체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비로소 전면적인 경제구조의 質 개혁에 착수하고 있으며 제조업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에 있어 2001년에는 실업률, 경제고통(misery) 지수 최하위 도시의 오명을 벗어나고 있다.

VI. 맺음말

본 작업을 통해 얻어진 성과는 다섯 가지이다.

첫째, 부산 제조업에 관하여 국내외 분산되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3년에 걸쳐

직할시로서.....," 부산시, 『단기 4292년 市勢一覽』, 1959. 서문.

수집하고 정비한 것이다. 둘째, 그 동안 부산의 제조업 통계에 존재하는 많은 오류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셋째, 일관 장기시계열 통계를 만들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했다. 넷째, 추정과 분석을 위한 기초 대변수 통계량을 찾아내었다. 다섯째, 경상가격과 함께 장기 시계열 불변가격 통계량을 구함으로써 기존 부산경제에 대한 선행적 인식을 직접 확인하고 검증해 볼 수 있는 최초의 제조업 기초 통계량을 정비하였고 실질적으로 이를 간단히 검토해 보았다.

연구자가 3년 이상의 통계작업을 했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연구의 향후 과제는 두 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 남아 있는 결측값을 추정하고 검증하는 일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충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추정을 위해서는 추정변수의 특성만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¹⁵⁾ 구조방정식을 설정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¹⁶⁾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는 추정한 후 검정통계량을 구해 비교하면서¹⁷⁾ 부산지역 경제발전의 史實 및 증언 대조 검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장기시계열 통계를 이용하여 부산의 제조업과 부산경제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추가적 다수의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서 이 후 연구의 비교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慶南名鑑編纂會編, 『단기 4294년판 慶南名鑑』, 1961.
2. 慶南名鑑編纂會, 『慶南年鑑 4288』, 1955.
3. 경상남도, 『도세개람』, 1952, 1953, 1955, 1956.

-
- 15) 1) 양측값이 존재하는 결측치의 경우 양쪽에 있는 것을 산술평균하거나, 2) 아니면 끝값부터 이동평균방법(MA)을 사용하거나(검정통해 최적차수(이동수) 설정), 3) 자기회귀방정식(AR)을 설정하여 추정하거나(검정통해 최적차수(시차) 설정), 혹은 4) 자기회귀이동평균(ARIMA) 방법(몇 가지 검정을 통해 최적시차 선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16) 1) 횡단형태로 일정한 계량모형을 설정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 후 추정모형에 추정치 관련 자료를 넣어 결측치를 추정하거나 2) 횡단자료와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패널모형을 설정하여 누락된 결측치를 추정할 수 있다.
 - 17) 1990년대 들어와 발달한 시계열 데이터의 안정성 검정을 위한 단위근, 공적분 검정(정기룡, 주수현, 1995)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4. 경상남도, 『도세일람』, 1957, 1958, 1959.
5. 경상남도, 『경상남도지(중)』, 1963.
6.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광공업센서스보고서』, 『산업센서스보고서』, 1972-90.
7.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1962, 1964, 1965.
8. 경제기획원, 산업은행, 『광공업센서스보고서』, 1966.
9.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광공업센서스보고서 시리즈 I』, 1963, 1964.
10.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70, 1971.
11. 김진엽, “한국 고무공업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5.
12. 남조선과도정부 商工部, 『商工行政年報』, 1947.
13. 남조선과도정부중앙경제위원회, 『南朝鮮産業勞務力及賃金調査』, 庶務處統計署, 1948.
14.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제조업요람』, 1955-1956.
15.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주요기업체名鑑』, 1956.
16.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기업체총람 1958년판』, 1958.
17. 대한연삼사, 『大韓年鑑』, 1952(3), 1955, 1956.
18. 배석만, “1950년대 부산지역 고무공업의 구조변화,” 부산경남역사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공동 심포지엄 논문집, 『1950년대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부산』, 2001, pp.30-43.
19. 부산, 경남연감 편찬회, 『부산. 경남 年鑑 1967』, 1967.
20. 釜山商工會議所 편, 『業種別工場操業狀況集計表(62)』, 1962.
21.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명감』, 1954, 1962, 1964.
22. 부산상공회의소, 『釜山案内』, 1964.
23. 부산상공회의소, 『상의월보』, 1962-1969.
24. 부산시, 『부산의 상공업』, 1965, 1967.
25. 부산시, 『부산의 역사』, 1978.
26. 부산시, 『상공통계연보 1969』, 1969.
27. 부산시, 『市勢一覽』, 1956, 1958, 1959, 1961.
28. 부산시, 『통계수시보』, 1967.
29. 부산시, 『시정백서』, 1969.
30. 부산시, 『통계연보』, 1962-2000.
31. 釜山市史編纂委員會, 『釜山略史』, 1965.
32. 부산지방해운항만청, 『부산항사』, 1996.
33. 부산직할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3, 1994, 1996-2001.
34. 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 20년』, 1984.
35. 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 30년』, 1993.
36.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釜山市史 제 2권』, 1990.
37. 상공부, 『단기 4283년도판 공장. 광산 명부』, 1950.
38. 상공부, 『단기 4285년도 상공생산종합계획』, 1952.
39. 상공부, 한국산업은행,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 종합보고서 1960』, 1961.

40. 嶺南日報社, 『韓國年鑑 1954』, 1954.
41. 정기룡 · 주수현, “부산지역 경제변수에 대한 시계열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제학논집』, 제 4 권 제 1호, 한국국민경제학회, 1995, pp. 175-199.
42. 정승진 · 강성권, 『부산지역 경제통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PDI 정책연구 17, 1999.
43. 『조선경제통계요람』, 1949.
44.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
45. 조선은행 조사부, 『經濟年鑑』, 1949.
46. 朝鮮通信社, 『1947年版 朝鮮年鑑』, 1947.
47. 중소기업은행, 『광업제조업 사업체 조사보고 1962』, 1963.
48. 차철욱, “이승만정권기 무역정책과 대일 민간무역구조,”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49. 최상오, “1950년대 외환제도와 환율정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50.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1, 1992.
51.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 사회상』, 1993.
52.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61 전국광업 및 제조업사업체 표본조사보고』, 1962.
53. 한국산업은행,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67』, 1968.
54. 한국산업은행,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 종합보고서 1958』, 1959.
55. 한국산업은행, 『한국의 산업』, 1958, 1960, 1962, 1964-2001.
56.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68-2001.
57. 한국은행, 『産業綜覽』, 제 1輯, 1954.
58. 한국은행 부산지점, 『1994년도 부산지역 경제연보』, 1995.
59. 한국은행조사부, 『經濟年鑑』, 1955a, 1956a, 1957, 1958, 1959.
60. 한국은행조사부, 『한국경제도표』, 1955b.
61. 한국은행조사부, 『4288년 광업 및 제조업사업체 名簿』, 1956b.
62. 한국은행조사부, 『단기 4288년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조사종합보고서』, 1956c.
63. 溝口敏行, 梅村又次編,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推計と分析』, 東洋經濟新報社, 1988.
64. Toshihisa, Toyoda, “Use of the Chow Test under Heteroscedasticity,” *Econometrica*, Vol. 42, No. 3, May 1974, pp. 601-608.

Long-Term Serial Manufacturing Statistics in Busan, 1945-2000

Young Goo Park* · Ji-yong Jang**

Abstract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step processes.

The first step is to collect every available data about the manufacturing sector in Busan, 1945-2000. The second is to correct the errors in the published manufacturing statistics of Busan. With the results after these two steps, we make a time-series data of the Busan manufacturing sector in 1945-2000 both in current and constant value. Finally we review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conomic situation and the data based on the series.

Key Word: busan, manufacturing, long-term time series

* Dept. of Economics,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Dept. of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ersity